

입법 앞두고 논란 가열... '획일적 독서교육보다 자발적 독서환경 중요' 목소리

'청소년독서진흥법'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 독서매뉴얼' 성토

청소년의 독서진흥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 국회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4년 내놓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2007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독서이력철'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독서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가 있는 뒤인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독서지도 자료집'을 발간했고, 부산시교육청은 그보다 앞선 2004년 3월부터 강원대학교와 연계, 독서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 독서교육 방침, 시민단체들 '학교교육 파행' 반발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독서관련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책으로파뚫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하 책파세), 책임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등 17개 단체가 모인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지난 9월 2일 성명서를 발표, "독서이력철"을 통해 개인의 독서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이를 위한 획일화된 도서 선정은 국가가 자행하는 문화적 폭

력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대신 "독서활동은 자발적인 실천으로 남겨두고 독서인프라의 구축에 전력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여론 탓에 입법 초안이 상당히 수정돼 본래 독서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수도서를 식별·인증하고, 독서전문인력양성기관, 독서인증기관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독서진흥기금을 만들고 독서전문가를 양성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 독서교육 의도 순수한가' 의문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5일 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주최로 '청소년독서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책 당국의 독서교육 열기의 타당성과 도서관의 활성화 등 독서환경개선의 필요성, 청소년독서진흥법 추진 주체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할 만큼 토론회 참가자 다수가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문제



학교 독서교육 강화는 우리 교육의 제1책무
“청소년독서진흥법으로 얼마나 학교 독서교육 정상화해야”

책따세 허병두 대표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태풍의 핵으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 현장 안팎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입시교육에 앞장서는 학교일수록 올해 교육계획에서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식으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현재 학습 풍토가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곤 하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독서가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허 대표는 특히 “일선 교사들은 ‘독서를 공부의 적’이라며 공공연하게 탄죽 걸던 입에서 하루아침에 ‘독서를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야 하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취재_ 신동섭 기자

삼았다. 특히 “독서를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제도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춘천교대 김상욱 교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독서를 새롭게 다가온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독서를 바라보는 등 독서의 의미를 지나치게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교육이 자본이 기획하는 도구로서의 인간형 양성이란 거대담론에 적극적으로 투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당국이 갑작스럽게 독서에 주목하게 된 것 역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지식기반사회에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명대 김종성 교수는 “그 강제 의 주체가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국가의 외피를 쓰고 있을 때,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독서라는 문화적 실천은 반드시 자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임을 강조했다.

‘독서진흥법, 도서관 등 독서환경 개선에 비중뉘야’

대신 이날 참가자들 가운데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바람직한 독서진흥 방법은 독서 행위 자체에 개입·통제하는 것보다는 독자가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선택에 따라 책을 접하고 독서를 경험하는 등 ‘환경을 통해 책 읽기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독서진흥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명대 김종성 교수는 “2003년 시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따라 외적으로 학교도서관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장서와 운영인력 등 소프트웨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약 300여 명으로, 전체 학교 3퍼센트 수준이다.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의 자율권

을 전했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서교육정책은 독서교육을 입시교육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입시 교육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허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독서교육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단순한 실패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기존의 독서교육 토대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와 독서문화 창달은 우리 교육의 제1책무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추진력에도, 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의 혼란을 거듭했던 종전과는 다른,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 책임범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1,500명과 학부모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관 담당교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교과수업과 담임업무에 밀려 운영에 한계가 있다.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004년 7.45권으로 미국의 25.9권, 영국의 11.7권, 일본의 20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다. 또한 잘 읽지 않거나, 낡고 훼손돼 이용할 수 없는 책, 분실된 책 등을 장서통계에서 제외하면 더 열악한 실정이다.

결국 김 교수는 “학교 도서관이 외형만 갖추려 했을 뿐 소프트웨어에 소홀했던 이유는 교육당국의 외형적 성과주의 경향에 기인한다”며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의 확충이나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서진흥 위한 포괄적인 통일조직 설치하자’

이번 토론회에선 또 청소년독서진흥법을 통해 독서교육이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이끌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책따세 허병두 대표는 “공교육에서의 독서는 단지 여가선용이나 학습이라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교육과 문화, 정보라는 세 가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독서진흥 역시 기존의 관련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부, 행정자치부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강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김옥선 사무총장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정책, 독서교육 전략, 학교 독서환경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통일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취재_ 신동섭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